

靑,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개최

관문점 선언 등 포괄적 표현 군비통제 분과위원회 신설 분과장에 서주석 국방차관

청와대는 28일 오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비통제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기존 '관문점선언 이행추진위'였던 위원회 명칭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정하고, 1차 회의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개청 명칭과 관련해 "관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이름을 바꾸려다가, 서울공동선언이 나오면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할지 실무적 고민이 있어서 아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포괄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행추진위는 1개 분과를 새로 추가해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분과는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분과장을 맡고 최경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행추진위는 평양선언 이행 기본 방향을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도약 ▲남북정상회담 성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의 연결 ▲이행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등 세 가지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추진위는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공동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유엔 사람부와 사전 협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이 서명한 10·4 선언 11주년 기념공동행사는 다음달 4~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사항은 이날 오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북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행추진위는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및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북측과 협의해 다음 달 중으로 개최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측 소장 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총력

이명연 도의원, 특위 조성 앞장 전략 조기수립 추진 가속도

이명연(사진) 전북도의원(전주 11)이 지난 28일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위 구성은 중앙부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에 맞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도정 핵심사업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정치권과 연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특히,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극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추가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담과 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와 국립연극관리공단 흥분기에 나선 현 시점에서 전북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안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전북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도정 연관성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포기키로

국회는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지난 1월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사용 내역이나 관련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가 항소기한인 지난 2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 대표는 "원칙적으로 지출 증빙서류를 불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정보가 공개되면, 사상 최초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의중이 국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번엔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심재철 국회 윤리위 제소... "가짜뉴스 생산은 국기문란행위"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문제제기를 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김정우·강병원·권미혁·권철승·금태섭·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종민·박경미·박영선·서영교·서형수·신동근·심기준·여기구·유승희·윤준호·윤후덕·이원욱·이철희·조정식·황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징계안에서 이들은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이 그동안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호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아마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자마자 심 의원의 징계안을 엄히 다뤄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인선

예산결산위원장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 예산결산위원장에 재선의 이학영(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당은 이날 최고위원에서 이갈이 의결했다. 이갈이 이해석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외교안보통일사무회의 의장에는 원혜영 의원,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수석부의장에는 박병석 의원,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에는 백재현 의원, 당 인권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다문화위원장에 홍미영 전 의원,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에 우원식 의원, 국제위원장에 이수혁 의원,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상설특위)에는 이석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당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 간 당정책의 정례화 및 당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 효율적인 업무 협업을 위해 정책조정위원회 담당 분야 재편을



의결하고, 새로운 정책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제4정조는 산자중기벤처·과기정통, 제5정조는 환경노동·농해수·국토, 제6정조는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여성가족으로 재편됐다. 제1정조위원장은 김민기 의원(재선, 행안위원), 제2정조위원장은 이수혁 의원(초선, 외통위 간사), 제3정조위원장은 이원욱 의원(재선, 기재위원), 제4정조위원장은 홍미라 의원(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제5정조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재선, 환경노동위원), 제6정조위원장은 신경민 의원(재선, 교육위원)이 각각 맡게 됐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남북 국회회담 참여 결정

바른미래당이 지난 28일 연내 성사가 시화되고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도 국회 회담이니까 함께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문화상국회의장실이 김관영 원내대표실에 국회회담 초청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광주와 대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